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일시 : 2022년 7월 15일 15:30~17:20
주최/주관 : 법무법인(유) 율촌, KBCSD,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개회 및 인사말씀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 주제 발표

EU ESG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

국내 ESG 공급망 실사 사례 및 정부 정책 동향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윤용희 율촌 변호사

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
이정우 KB국민은행 팀장

| Q&A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 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 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안'을 내어놓으면서,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가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음. 이번 행사는 공급망 실사의무의 법제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내용을 주로 담음

Key Takeaway 1
공급망 실사 제도란

-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실사 제도가 2000년대 초반 산업재해, 강제노동과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공급망 관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함
- EU는 2020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음. 적용 대상은 EU 기업과 제3국 기업이 모두 포함됨.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군에 연관된 중소기업도 적용 대상임
- 기업은 강제 노동 폐기물 문제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완화, 제거 및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영향평가는 최소 1년에 1회 진행해야 함.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음

Key Takeaway 2
국내 ESG 공급망 실사 사례

- 국내 중견 기업 중 법 적용을 받는 곳은 110개로 추산되며, 업종은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 바이오, 화장품 등 EU 수출량이 많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상위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실사 진행, 자기 평가 및 제3자 평가 실행, 정보 공시와 평가를 구매계약에 반영하는 기업은 6개 정도에 그침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의 공시 정보를 보면, ESG 평가는 수행하고 있으나 결과가 사업관계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 안 됨.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해외 사례는 3~5% 정도의 기업과 실사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관계를 철회하고 있음

Key Takeaway 3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

-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중소·중견 기업용 K-ESG 가이드라인은 4분기 중에 발행될 예정이며, K-ESG 온라인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에 런칭할 계획이라고 밝힘. K-ESG 플랫폼은 기업의 ESG 보고서 수집, 정책 및 동향 리포트 업로드, 의견 청취 기능을 함
-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ESG는 국내법에서 국제법, RE100과 같은 연성규범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함. 기업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라고 권고함
- 이정우 KB국민은행 팀장은 KB-ESG 지표를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용 무료 온라인 ESG 진단 시스템을 개발함.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하면 5분 안에 결과가 나오며, KB는 평가 결과를 대출 상품 등에 반영하여 금융 혜택을 제공함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개회 및 인사말씀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기업이 공급망의 ESG 현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급망 ESG 실사 지침(*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공개했다. EU는 2024년까지 나라별로 관련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향후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및 행정제재와 민사 책임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 지침안은 기업들에 자사와 자회사를 넘어 거래하고 있는 공급망 전체에 대해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잠재적 영향의 예방,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광범위한 관리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 법률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의무를 늦게 준수하면 가산금이 부여된다. 토탈 에너지, EDF(프랑스 전력공사)와 같은 프랑스 기업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노동자 인권 침해 등 7건의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침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자부는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추세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시행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SG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ESG 역량을 강화해야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EU회원국별 감독기구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에 대한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결정할 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KBCSD는 스코프3 제품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

핵심 Comment
EU집행위원회는 2월 기업의 공급망 ESG를 규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공개했음. 나라별 법규가 2024년까지 마련될 예정임. 규제법이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별 ESG 리스크 대응 지원, KBCSD는 스코프3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임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

EU ESG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실사 제도는 2000년대 초반 공급망 관리에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됐다. 파키스탄의 한 섬유 공장에서는 2012년 불이 나서 직원들 2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라는 의류 공장은 2013년에 붕괴되어 1125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라나플라자는 H&M이나 베네통과 같은 유명 EU브랜드의 옷을 만들던 공장이다.

콩고 공화국에서는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노동이 벌어지고, 브라질은 2019년에 댐이 무너져서 2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댐은 독일 기업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한 후 몇 개월 만에 무너졌다. EU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공급망 실사 지침이 나오게 됐다.

이 법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공급망'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됐고,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으로 발표됐다. 규정은 바로 적용해야 하지만, 지침은 회원국별로 자체 법률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침은 위반했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하고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는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 노동 착취를 중심으로 한 규제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인권과 환경에 연관된 실사법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2017년에 법을 마련하여 2019년에 의회를 통과했고,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은 2023년에 1차 공급망을 대상으로만 시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2021년에 법령을 마련해서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법은 독특하게도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은 대기업에 준한다고 기재했지만, 종업원 수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여도 포함되는 상황이다. 노르웨이는 적용 대상 기업이 8800여 개로 프랑스가 200~300여 개인데 비하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0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U의회 결의안은 2021년 3월, 집행위 지침안은 올해 2월 23일에 발표됐다. 집행위 지침안은 기존에 포함됐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실사 내용은 기후변화가 제외되고, 인권과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기업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안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유럽 의회와 집행위 안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의회는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을 회원국의 재량으로 두었다면, 집행위는 조건부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보 공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회는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집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회와 집행위 간 이견 조율이 수월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EU 기업과 제3국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EU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만 3000여 곳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은 고용인 500명 초과, 중견기업은 251명 이상이다. 중견기업은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에서 1억 5000억 유로가 되면 실사 의무를 부과 받는다. 중견기업과 제3국 기업은 순매출액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5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다. 고위험 산업군은 섬유와 광물 제조, 무역, 농업 및 임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제3국 기업은 4000여 곳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적용 시기는 대기업은 지침 발효 후 2년, 중견기업은 4년부터다. EU 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지침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법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

EU ESG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사 의무 위반사항은 부록서에 '인권,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나와 있다. 인권은 공정한 임금, 양질의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근로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과 인신매매 노동 금지 등을 포함한다. 환경은 수은과 관련된 미나마타 협약, 바젤 협약에 따른 유해 폐기물 수입 금지, 멸종 위기종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한다. 기후 변화는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식별, 예방, 완화, 제거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방 조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실사를 수행할 경우에 계약 사항을 보증 받아야 하며, 협력사는 보증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회사는 최소 12개월마다 영향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사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집행할 때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회원국 간 통일된 지침 적용 및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술과 금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했다. 감독기구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시정 조치를 취한다. 감독 기구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중지, 행정 혹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업이 자체 활동이나 협력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액은 기업 매출액에 비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국이 결정한다.

국내 중견기업 중 법 적용을 받는 곳은 110개 정도이다. 업종은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 바이오, 화장품 등 EU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 유념해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법령에서 빠져 있지만, 공급망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기업이 ESG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대응이 취약한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기회이기도 하다.

핵심 Comment

EU 지속가능성실사 제도는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조건부로 적용받게 됨. 국내 중견기업은 110개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공급망 실사법이므로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게 됨. 이 법이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을 위반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음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국내 ESG 공급망 실사 사례 및 정부 정책 동향

생산성본부는 공급망 ESG와 관련해서 상위 50개 기업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한 사항은 협력사에 대한 행동규범이 있는지와 자기 평가와 제3자 평가가 진행되는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였다. 36개 기업이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26개 기업이 자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15개 기업이 제3자 평가를 했다. 공시하는 기업은 이 중에 9곳이 있었고, 평가를 구매 계약에 반영하는 기업은 6개 정도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ESG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구매계약이나 인센티브, 페널티에 적용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 의무가 발효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여러 실사 과정을 거쳐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의 공시 정보를 확인해봤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은 2차 협력사까지 공급망 ESG 실사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곳, 현대자동차가 400곳 내외, SK텔레콤이 1200곳의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RBA(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현대자동차는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 관련 GSI를 포함해 약 30~40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평가 결과가 사업 관계에서 어디까지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애플이 1121 곳, 제너럴일렉트릭(GE)이 1286 곳, BMW는 3220 곳에 달하는 협력사를 평가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실사 결과에 따라 약 3~5% 정도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철회하고 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리스크로는 유해 물질 관리와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미흡과 안전장비 미지급이 현장에서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성본부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현장 담당자의 50%가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도입할 환경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게 중론이었다.

실사가 도입되려면 우선 가이드라인 또는 설명서가 필요하다. 산업별 이니셔티브는 요구하는게 각자 다르다. 대기업이 공급망 관리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SG 리스크는 1차 협력사에서 2차, n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관리가 취약하다. 대기업이 n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SG 공급망 실사는 이해도에 따라 기업들의 평가 수준이 차이 난다. 매출이 1조 원, 14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이 평균 이하의 평가 점수를 받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실사 대응 경험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이다. IT 기반의 공급망 ESG 관리도 필요하다. 기업 정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IT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ESG 공급망 실사에 네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버전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K-ESG 경영 지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용 K-ESG 가이드라인은 4분기 중에 발행될 예정이다. K-ESG 온라인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에 런칭할 계획이다.

K-ESG 플랫폼은 정보 제공 기능, 역량 제고 기능, 경영 지원 기능,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정보 지원은 기업들의 ESG 보고서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ESG 관련 정책과 동향 리포트를 업로드하는 기능이다. 역량 제고는 글로벌 ESG 평가 정보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민 참여 마당을 개설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법 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국내 ESG 공급망 실사 사례 및 정부 정책 동향

ESG 경영 지원은 K-ESG 가이드라인과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공유하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네트워크 구축은 협력단체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정보 포럼을 나누는 기업이다. 특히,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ESG 지원 시범 사업 중 하나로 모의 실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실사 기능은 실제 대기업이 실행하는 실제 실사와 동일하며 결과 보고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적용 기업은 약 3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핵심 Comment

국내 기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급망 실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음. 해외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실사 결과가 실제 비즈니스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임. 정부는 K-ESG 경영 지원 플랫폼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임

윤용희 율촌 변호사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ESG는 소송 리스크도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제조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곳이 개도국이고, 그곳에서 강제 혹은 아동 노동을 통해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자기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리스크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ESG 리스크는 과거에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만 대응하면 됐다. 이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이제는 국제 규범과 외국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 EU 지속가능 실사 지침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그 사례이다. 법이 아닌 행동 규범의 형태로 요구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이다. 고객사가 5년 안에 RE100을 달성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국내 법령과 같은 강성 규범에 주로 신경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 규범과 외국 법령이 리스크로 다가오게 된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도 한국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본법안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 총론적인 법안을 기반으로 EU 지침에 준하는 법령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EU 지침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통관을 막는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미국 안에서 수입하려는 기업은 공급망을 확인해서, 원료나 제품이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아동 및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기업이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다. 글로벌 고객사가 한국기업에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인권경영헌장과 협력사 관련 행동 규범,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기업은 실사 대응의 첫발을 앞서 언급한 기본 문서를 만드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은 기본 문서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과 연례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진단 평가지를 제작함으로써 ESG 리스크 대응의 출발점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핵심 Comment

ESG는 법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음. 기업은 기존에 환경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국내법에만 대응하면 됐으나, 이제는 EU 지속가능실사지침과 같은 국제 규범과 외국법령, RE100과 같은 행동규범에도 대응해야 함. 인권경영헌장과 연례 평가 진단지를 제작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

이정우 KB국민은행 팀장

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

기업은 2022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상승하여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SG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ESG가 잘 준비되지 않은 기업을 보면, 잘 준비한 기업보다 부채와 자본 비용이 훨씬 높다. 글로벌 ESG 원칙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은 6경 원 정도이다. 미국은 2021년에 511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ESG 관련 펀드에 유입됐다. ESG는 부채 비용을 낮추고 투자 자금을 유입하는 재무적인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5월 트위터를 통해서 특이한 행보를 보여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과 강제 노동의 결과로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오르고, 기술 주식이 떨어진 효과도 있다. 영국의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는 지난해 상장했다. 런던의 연기금인 애버딘 스탠다드와 스코틀랜드 펜션 펀드가 딜리버루의 상장을 반대했다. 딜리버루는 배달원들의 인권 문제가 있는 회사였는데, 투자자는 이를 보완한 후에 IPO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회사가 강행한 것이다. 펜션 펀드들은 이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상황에서,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IPO를 강행하자 상장 당일 주가가 30% 폭락했다.

KB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하는지 설명해드리겠다. KB는 그린웨이브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ESG 관련 대출 투자 상품을 50조 원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 내부의 탄소중립은 2040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한다. KB는 지난 1월 중소기업을 위한 ESG 컨설팅 조직을 설립했다. ESG 경영진단은 2주간 진행한다. 이를 위해 78개 KB-ESG 지표를 만들었다. 진단은 생산성본부와 이크레더블이라는 신용평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장실사도 진단을 바탕으로 해드리고 있다.

지표는 K-ESG 가이드라인, RBA 가이드라인을 융합해서 개발했다. KB ESG 지표는 노동·인권 27개, 안전·보건 28개, 환경 12개, 기업 윤리 11개를 개발했다. 지표 개발에는 KPC와 K-ESG 가이드라인을 제작에 참여했던 전문가, KB금융의 ESG 담당자가 함께 힘을 모았다. 내용은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법정 휴일 및 휴가 보장, 인도적 대우, 응급처치 인력, 비상상황 대비 훈련,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편의 공간 제공, 외국인 기숙사 위생, 환경 오염 방지, 자원 절약, 유해 물질 취급 등이 있다.

진단은 기업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항목별로 ESG 평가 결과가 바로 나오는 IT 시스템으로 개발했다. 이용은 무료이며 결과는 5분 안에 나온다. KB금융은 이 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우대와 대출의 익스포저를 늘리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드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ESG 경영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4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KB금융이 공급망 실사를 해보니, 경상남도에 있는 한 발전 부품 제조사가 눈에 띄었다. 이 기업은 두산과 현대중공업, 제너럴 일렉트릭에 납품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7월 중에 실사를 온다고 들었다. 이 기업이 KB 현장 진단을 요청해서 평가해보니, 노동 인권은 우수한데 환경 부문에서 폐기물 이슈가 있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평가 지표는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폐기물 보관소, 환경 정책 수립과 같은 권고사항을 기업에 전달해 드렸다.

서울 소재 한 화장품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독일에서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진단 결과는 중간 수준인데, 폐기물과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꽤 많았다. KB금융은 독일의 컴플라이언스 업체와 연결하여 컨설팅을 해드린 상황이다. 독일은 2019년 1월부터 포장재 법이 개정되어, 제조업체가 직접 독일에서 유통하지 않더라도 수출하면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생겼다.

이정우 KB국민은행 팀장

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

한 베어링 제조업체는 중국의 제철소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은 인권, 노동을 포함한 분쟁 광물 문제가 있다. 이 기업은 유럽에 수출하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다. 우선, 원산지 인증서와 모니터링에 관한 권고를 해드렸고 계속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마지막은 인천의 현대차 벤더이다. 이 회사는 SK와 현대차 양쪽에서 실사를 받고 있다. 북미의 컨티넨탈사라는 독일계 차 부품, 타이어 기업에서도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회사가 KB에 긴급히 진단을 요청하셨다. 현장에 가보니, ESG와 관련한 대부분의 개념은 다 알고 계셨으나 실행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실행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ESG 대응 담당자가 없어서 총무팀에서 일을 분담해서 실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SG 공급망 관리는 유럽, 미국 등 ESG 선진국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이다. ESG 대응 활동은 단순한 사회적 효용을 넘어서 거래 관계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등장했다. 수출 대상 국가나 거래처나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ESG 규준 및 정보를 갖춰야 된다 컨설팅, 자문기관, 법무법인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ESG를 강조하다가 본업인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되는 상황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핵심 Comment

KB는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를 개발함. K-ESG와 RBA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78개 지표로 구성된 KB ESG 지표도 만들었음. 중소기업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ESG 진단평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5분 안에 결과가 나옴. KB는 평가 결과를 대출 등에 반영한 금융 혜택을 제공함

| Q&A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실사 제도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공정거래법의 약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윤용희 변호사

교통정리가 될 이슈라고 본다. 중소·중견 기업은 유럽 고객사의 요구든 한국 대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든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된다. 고객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접 실사하겠다거나 ESG 평가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국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 정보 요구 행위나 다른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고객사에 요구한 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으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요구가 위법한지를 살펴보게 된다. EU 공급망 실사법제와 기업들이 사적 자율 규제로 중소기업에 자료와 협조를 요청하는게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를 고객사에 직접 주고 싶지 않다면, 에코바디스를 비롯한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이용하는 대안도 있다.

Q. 글로벌 회사들은 EU 법인이 있고, 국내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EU 법인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내 본사도 대상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윤용희 변호사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 둘 다 동의해야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된다. EU 실사 지침은 지침안으로 나왔고, 이 안을 기초로 의회와 이사회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법령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령이 마련돼도 유럽에 있는 국민들을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행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장현숙 팀장

의회와 이사회가 이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끝난다면 연내에 체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의결이 지연되어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최종안은 기존의 발표안과는 다른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에서 실사법은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소송의 주체는 대부분 시민단체, 인권단체, 지역 사회의 NGO이다. 기업들이 수출하는 지역에 있어서 사회활동, 공헌,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조금 더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담당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라는 문의를 많이 주신다. 정승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 대기업들이 못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열심히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규제에 다르게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의 ESG 경영 활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좋다.

Q. 정승태 센터장님과 이정우 팀장님은 실사 경험이 많으실 텐데, 실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기업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린다.

정승태 센터장

최근에 실사 요구가 많이 늘고 있다.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요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소·중견 기업 사장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에코바디스나 RBA 실사를 요구 받게 됐는데 생산성본부에서 대응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예산이 아주 다르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예산임에도 투입되는 자금을 볼 때 큰 규모의 컨설팅사가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 대기업들도 이런 요구를 받고 있으므로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반영하시기를 바란다. 이는 비용보다는 투자라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코바디스를 포함한 이니셔티브는 데이터의 신뢰성 허용 범위를 설정한다. 기업 데이터가 신뢰성을 100% 채워야 할 필요는 없고, 5~10% 정도의 유예가 있다. 기업이 협력사에 실사 요구를 했을 때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허용 범위에 두고 대응할 수 있다.

이정우 팀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님, 경영진과 미팅을 많이 하는데, ESG 대응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경영

| Q&A

과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ESG는 다양한 지표와 요구사항이 많아서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경영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어서, 실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팁은 우선 에너지 저감 혹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려우니, 정책이나 강령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데서 시작하는게 좋다. 이는 하나씩 준비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임팩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령과 정책 수립이 어려우면, 내부 KPI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인권, 노동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간단한 KPI 목표를 설정해놓는 방식으로 조금씩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